

김 지사 - 전주시의회, 지역발전 협력 약속

전주시의회 방문 김관영 도지사, 이기동 전주시의장 등과 현안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18일 전주시의회를 찾아 현안 사업과 각종 매칭 사업, 전주시 발전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는 일행은 전주시의회에서 이기동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전북의 인구가 밀집된 전주시가 잘 살아야 전북이 살아남는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들도 전북도 매칭 사업비 상향 지원, 제2의 혁신도시 김제시 용지면 제안,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유치 등을 요청했다.

정설희 행정위원장과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은 “전주시의 전북도 매칭 사업 비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18일 전주시의회를 찾아 현안 사업과 각종 매칭 사업, 전주시 발전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낮다. 시군 상황에 맞는 비율을 반영해달라”며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린 만큼 철도와 항구 교통이 유리한 지역이 제2의 전주 혁신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제시 용지면을 제2혁신도시 대상지로 제안했다.

이병하 부의장은 “다른 지역보다 지역적 요인 및 관광, 문화 여건이 유리한 전주시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유치되어야 한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14개 시군 상황을 잘 고려해 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정하고 협평생에 맞게 매칭 사업 및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원도심 ‘글로컬 명품 상권으로’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최대 55억 지원 받아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 상권’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주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주 원도심 일대를 글로컬 명품 상권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한 ‘2024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글로컬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설된 공모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로컬 콘텐츠 중심의 상권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는 것을 목표로 ‘글로컬 상권 창출팀’ 3곳과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5곳을 선발했다.

시는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 선정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웨리단길과 객리단길, 영화의거리 등 원도심 상권을 로컬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해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상권’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5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대표기업인 (주)크립톤을 중심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국내외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명품 상권으로 만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김지훈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방직 부지 시세차익 환수금 재산정 주장

“용도변경 전후 공공기여금 산정 등 시민 이익 최대 환수 원칙에 맞는지 의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자광의 대한방직 터 용도변경 전후 공공기여금 산정 등이 시민 이익 최대 환수 원칙 등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참고한 (주)자광의 사업계획안은 전시장, 공연장, 라이브러리 팩트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관광인프라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 대한방직 터구단위계획에는 컨벤션센터나 공공문화시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이전 일반 상업용지 용적률인 500%로 대폭 올랐고, 일반상업용지

용적률도 500%에서 900%로 법정 최대 치까지 올랐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에서나 지을 수 있던 49층 아파트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만큼 사업주의 이익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인 도시계획변경 후 총 부지 기액의 40%를 고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례로, 백화점과 호텔로 용도변경 예정인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의 2023년 4월, 감정평가가 가격과 대한방직 터 상업용지 평균 3.3m²당 330만원이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최근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350%에서 이전 일반 상업용지 용적률인 500%로 대폭 올랐고, 일반상업용지

전주 종합경기장 백화점 부지 감정 평가액은 3.3m²당 1,980만원인 반면, 대한방직 복합 쇼핑몰 부지는 3.3m²당 1,650만원이다.

대한방직 부지 일대는 도청과 경찰청, 방송국 등 공공기관과 상가와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거시설, 학교, 병원 등이 대거 자리한다는 점에서 원도심권인 종합경기장 부지보다 토지 이용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한방직 부지 현재 땅값은 6년 만에 1,850억원이 오른 3,83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주)자광은 2018년 1,980억원

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당시에도 대한방직과의 토지 거래 기격이 시중 거래가 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자광은 대한방직 땅을 사두기만 했는데, 5년 만에 매입가의 93.4%인 1,8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올랐다. 이는 대한방직 터의 토지 가치 상승 여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850억원대의 지가 상승이 발생한 만큼, 이를 토지 가치 상승분에 반영하거나 당시 토지 매수금에 일관적인 지가 상승분 정도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매월 1회 임대차 무료법률상담 제공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상담 · 온라인 · 유선 등 다양한 상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매월 1차례 전문 변호사(청명 법률사무소 이진아 변호사, 승문 법률사무소 정영일 변호사)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전주시 시민의 주택 관련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차 무료법률상담소는 지난 2022

년부터 시작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2명의 전문 변호사가 격월로 참여해 매월 1회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센터는 대상자가 긴급한 상황 해결이 요구될 때에는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변호사 연결 등 주거문

제 해결에 빨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택임대차 무료 법률상담소는 지난 2년간 △장기월세 체납 △전세사기 의심 사례 △토지 권리분쟁 △보증금 상환 문제 등 총 75건의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임차인의 다양한 주거 문제 상담뿐 아니라 임대인도 본 상담을 통해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오는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무료 법률상담은 전주시 거주 주거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주시민 모두의 주거권과 복지향상 실현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화(063-281-0160)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거 문제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부 암박 및 인공호흡, 119 신고와 심정지 예방, 기도 폐쇄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마네킹과 교육용 제세동기 등을 교보재로 활용해 실습을 실시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언제 어디에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시민들 또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공단 수영 강사가 심폐소생술 중요성과 기본절차, 흉

/김옥기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